

교육권을 무너트린 손으로 교육권을 지킬 수 있을까?

교육의향

윤영백
광주 여자상업고
교사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 분노도 만만치 않다. 학교장에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악성 민원인의 영업장을 찾아 별점 테러를 하는 등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법과 제도의 문제 등을 함께 살펴서 해법을 찾아야 할 일이지 않지만, 악성 민원에 의한 피해자를 '어느 교사'로 좁게 보지 않고, '교육권 붕괴'를 짚어줘야 하는 자신이나 사회까지도 넓게 보게 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 같은 분노가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라면, 교육권 회복은 기존의 법, 제도, 관행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곳은 광주시교육청일 것이다.

광주는 2018년~2019년 당시 최소 50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민원만으로 수업 배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광풍이 휩쓸던 곳이다. '교육권'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당시의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권 붕괴를 가속했던 이들은 교육권을 책임지는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 부단히 학교로 흘러가고 있다. 당시 수많은 사건 중 배이상헌 사건을 통해 행정이 어떻게 교육권을 무너트렸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교사 배이상헌은 도덕시간 성평등 단원을 수업한 일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업 배제, 수사의뢰, 직위해제된 이래 경찰, 검찰, 교육청 징계위, 소청에 이어 각종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은 교사가 사회적, 경제적, 생물학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500일 가까이 교육청 정문 시위를 했었고, 당대 지성인들의 비판이 있었고, 프랑스 최대 교사노조의 권고가 있었고, 대규모 집회도 열렸으며,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

감은 배이상헌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답하지 않았다. 단지, "민원인이 학생이니 학생 편을 들겠다"는 말만 읊조렸다. 학생은 약자이니 약자의 자리에서 발화된 민원은 진실로 전제하겠다는 이 단순한 철학과 무식한 정의감만이 지금까지 저질러진 행정 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남아 있다.

교육감이 웅색한 자리로 물리게 된 것은 당시 교육청 관료들의 끈적끈적한 동조 덕분일 것이다. 대부분 자신도 교사였거나 그 언저리에 있었던 만큼 교육할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본능처럼 잠재되어야 마땅하지만, 오로지 민원만으로도 교사를 경찰서에 보낼 만큼 그들은 우악스러웠고,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당시 정책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을 핑계로 들었다. '전국적으로 광주에서 가장 악랄하게 교사들을 교실에서 내쫓고 있다.'고 비판하면 '광주가 가장 악랄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매뉴얼에 가장 충실할 뿐'이라고 변명했다. 성인식당 장학생들은 편협하게 해석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신앙처럼 행정에 적용했는데, 수업 배제된 교사에게 왜 혐의조차 말해주지 않는지 따지면, '혐의를 알려주면 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고한 학생을 색출하러 가는 일이다'고 했다. '그런 행위를 경고하고, 위반시 처벌하면 되지, 원천적으로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 '거의 모든 교사가 다 그러는데, 학생을 보호하지 말라는 거냐'고 맹신도처럼 되받았다. 효천중 교권보호위원회가 배이상헌 사건에 대해 '교육권 침해 여지가 있으니 교육청이 소명하라'고 결정했지만, 담당 관료들은 이 결정을 끝까지 무시했다. 대신 교육 전문성이 전혀 없는 여성단체 운동가로 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방패막이로 삼았을 뿐이다.

장휘국은 3선에 도전할 때 '교권 보호'를 내세웠고, 교권 담당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교육권에 대한 전문성도 관심도 거의 없었다. 교사들이 무더기로 최소한의 방어권, 소명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교실에서 쫓겨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들은 회

피하기 급급했다. 교권보호센터 역시 교육권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곳이 아니었다.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 침해는 끝까지 외면했다. 당시 담당 장학관은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만 다룬다"며 교육청의 폭력에서 눈을 돌렸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와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소명 기회 부여 의무에 대해 심의를 거부했다.

감사실의 활약도 눈부셨다. 부장검사 출신이 감사관이었지만, 교원지위법은 고사하고 형사법이 보장하는 법익에서 교사가 제외되는 일에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 감사실 관료들은 검사가 쓴 무혐의 처분 사유, 판사가 쓴 무죄 선고 근거 등을 모두 지워버리고, 최초 민원에 근거해서 무혐의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릴 명분을 제공하는 행정을 도맡았다.

그리하여 광주의 교육 현장은 교육을 일구려는 마음마저 처벌되는 상황에서 이미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 주검이 오늘날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교육감이 바뀌었지만, 새 교육감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풍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보거나 굳이 힘을 빼서 되돌아볼 필요가 없는 일로 여기는 눈치다. 게다가 서이초 교사의 죽음 앞에서 '학생 인권조례개정'을 운운하거나 9월 4일 추모제 참여를 두고 오락가락 행태를 보인 것을 보면 별다른 기대를 갖기도 힘들다. 이 가운데 교육권 붕괴를 가속했던 관료들은 현장의 교육권을 지켜야 할 교장, 교감으로 영전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이 지킨다'는 말을 주먹거리고 있을 것이다.

교육권에 대한 진심도 없이 성난 여론이 선생님을 떠나, 학생, 학부모를 떠나, 따라 다른 표정을 짓는 이들이 과연 학교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다르다'는 식의 궤변만으로 교육권 보장은 요원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지난 사건을 되돌아보고, 폭력 행정의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성찰하고 사죄하는 시간이 생길지 바란다. 그런 시간을 고통스럽게 통과해야만 비로소 교육할 힘이 자오르기 시작할테니까.

社說

불 밝힌 사랑의 온도탑, 온정 이어지길

여러 명의 작은 기부 필요해

지난 1일 광주·전남의 '사랑의 온도탑'이 불을 밝혔다. 목표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 목표를 달성하면 100도를 가리키게 된다.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구 도청 분수대 옆)에 온도탑이 세워졌다. 전남은 전남도청 광장(서부권)과 여수시청 앞 1호 광장(동부권)에서 온도탑을 설치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디자인 공모로 만들어진 '손모아 장갑' 형태를 띤다. 이번 디자인은 장갑이 이웃을 감싸듯 나눔 기부로 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광주는 50억 7000만 원, 전남은 105억 5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4~6%가량 높게 모금액을 설정했다. 모금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 온정이는

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한다. 모아진 성금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환경개선과 소외된 이웃의 긴급생계비 등으로 쓰인다.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늘 펼쳐졌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광주·전남은 5년 연속 목표액을 추가로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목표 달성을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와 지역 사업체의 경영악화 등이 겹쳐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살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모금회의 올해 슬로건이 '기부로 나를 가지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지있게!'이다. 한 명의 큰 기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의 작은 기부가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기부 확산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광주·전남 사·도민은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왔다. 올해도 많은 사·도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져서 다 함께 훈훈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기원해 본다.

직매립 금지 눈 앞... 지역 이기주의 안돼

지역과 공동체 이익 우선 돼야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원회수 시설을 위한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시·나브로 다가오는 직매립 금지 앞두고 '내 지역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안타까운 일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차 공모 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개 모두 응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응모자격을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으나, 신청인들은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일부 시·군도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목포·신안 광역화와 순천·구례 광역화, 광양, 곡성, 보성 등 총 5곳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외곽에 입지를 선정한 목포시와 기존 부지에 재설치를 추진하는 보성군을 제외하고 순천과 광양, 곡성 등은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뜰'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쟁화로 치닫는 모양새다.

광주시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1.06kg에 이른다. 같은 기간 광주시의 하루 매립량도 469.2톤이라고 한다. 지금은 매립으로 버려지고 있지만 직매립이 금지될 경우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지역민의 전향적 대응이 시급하다. 과거의 기피 시설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기피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려는 지역민 개개인의 관심도 필요하다.

서석대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생애 처음 폐호흡을 하게 되는 순간, 아기는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후에도 아기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상태를 알리기 위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찢먹던 힘까지 다해 울음을 터트린다. 울음이 전부터 아기는 울음을 통해 부모에 대한 사랑(신뢰)을 느끼며 세상과 소통해 간다.

언젠가부터 한국에 아이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볼록한 배를 드러낸 입산부, 유모차를 끌며 지나가는 부부의 모습조차 보기 드문 풍경이 됐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 극단으로 치닫는(사회·경제적) 갈등... 당장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내놓았고, 그 결과 많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생겼다. 그럼에도 한국의 가파른 출산율 저하는 막지 못했다. 한국

의 총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에서,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졌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기조 속 전남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었고, 어떤 시·군은 '몇 년 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펼친 인구 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순천시와 나주시와 함께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다. 여기에는 전남 지자체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물론 주산기전문병원·공공산후조리원 등 탄탄한 의료 인프라가 크게 한 몫했다. 또 오는 20일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남 지역 소아 환자들의 의료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청년층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순천시 사례는 결혼과 출산만을 강요하는 단발성 정책 대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부모 혹은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는 부모, 행복하게 살 수 있던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 아이는 더 우렁차게 울음을 터트린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지자체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저출산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양가람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